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엠바고 : 즉시 보도 가능

배포 : 2023년 8월 1일(화)

## 「자동차세 등의 배기량 중심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 자동차세, 기초생활수급자격,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에서 적용 -
- 대통령실, 제4차 국민참여토론 시작, 3주간 실시 예정 -

대통령실은 오늘(8.1, 화)부터 8.21(월)까지 3주간 ‘배기량 중심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 방안에 대한 제4차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합니다.

※ 1차(1.9~2.9)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2차(3.9~4.9) TV 수신료 징수방식  
3차(6.13~7.3)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국민참여토론은 「대통령실 국민제안」으로 접수된 여러 제도개선 제안 중 △생활 공감도 △국민적 관심도 △적시성 등을 고려하여 「국민제안심사위원회」에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선정한 주제에 대하여 실시합니다. 누구나 국민제안 누리집 (<https://withpeople.president.go.kr>)을 통해 토론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토론이 종료되면 제시된 국민의 의견을 점검·분석하고, 「국민제안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권고안을 마련합니다. 이후 대통령실은 권고안을 관계부처에 전달하고 국민제안 누리집을 통해 국민들께 공개합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기술과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데 비해 자동차 행정기준은 1990년대에 머물러 있다”며, “자동차세나 기초생활수급자격 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등 여러 제도에서도 활용 중인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끝>

붙임 : 제4차 국민참여토론 발제문

**붙임 제4차 국민참여토론 발제문**

**< 자동차세, 기초생활수급자격 등에서 적용되는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 >**

자동차세 산정, 기초생활수급자격 선정 등 각종 행정상 기준이 되는 자동차의 재산가치는 배기량을 중심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가액이 낮은 대형차 보유자에게 불합리하고, 배기량이 아예 없는 전기차·수소차도 증가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다수 제기되었습니다.

자동차세(승용차)의 경우, 배기량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되 차량 용도에 따라 부과 기준(영업용 cc당 18~24원, 비영업용 80~200원)을 달리하고, 차령(車齡)이 많을수록 감액하고 있습니다. 반면, 배기량이 없는 수소차와 전기차는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분류하여 정액 10만원을 부과합니다.

이에 대해, 제안자는 “자동차세의 취지를 재산가치와 환경오염, 도로사용 등을 감안한 세금으로 이해한다면 배기량이 아니라 차량가액과 운행거리에 따라 부과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며, 환경오염을 생각하여 전기차와 수소차의 자동차세를 감면하더라도 차량가액에 따른 차등적인 부과가 필요하지 않은지 검토해봐야 한다”는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의 경우, 수급자 선정을 위한 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월 4.17%를 적용하는 승용차는 배기량 1,600cc 미만(생계·의료급여 기준)으로 차령, 가액, 용도를 종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 장애여부, 급여별, 용도별(생계용/비생계용) 등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은 상이

이에 대해, 사별한 남편이 물려준 중형 중고차를 보유할 수 없어 이를 팔고 다시 소형 중고차를 구매해야 하는 제안자, 다자녀 가정의 아버지로서 대형차를 렌트하여 사용하다가 수급자격이 박탈된 제안자 등으로부터 배기량 상한을 완화 또는 폐지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요약하면, 배기량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1. 기술 발전과 시장 변화에 따라, 배기량과 차량가액이 비례하지 않을 수 있는 점,
2. 세계적으로 배기량이 아예 없는 수소차·전기차가 증가하고 있는 점,
3. 자동차는 사치재가 아니라 필수재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배기량 기준을 차량가액,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배기량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1. 배기량 기준은 재산, 환경오염 등 자동차가 가지는 복합적인 성격을 골고루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고,
2. 대형차 보유자는 유지·관리 비용을 감당할 소득이 있다고 추정될 수 있는 점,
3. 특히, 세계 개편은 한·미 FTA 등 외국과의 조약과 어긋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들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에 대해 찬반 양론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과 같은 ‘배기량 기준’이 적절한지, 보다 합리적인 기준으로 어떤 것이 있을지 국민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들려주세요.